

산업계, ‘퍼펙트 스톰’ 직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서둘러야

〈복합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전 5시(한국시간)께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에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타격 불가피... “정부 적극 협상해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상호 관세는 피했지만 수입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반도체 상호관세 제외 개별 관세 예고... 안심은 일러韓 기업, 실적악화 불가피 전망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 대수는 413만대로, 이중 수출 대수는 278만대, 그 비중은 67%에 달했다. 이 중 대미 수출 대수는 143만대(현대차·기아 101만대, 한국GM 41만대)로, 전체 생산의 35%, 전체 수출의 51%를 차지했다. 미국 자동차 수출액도 347억4400만달러(50조 원)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동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63억달러(약 9조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의 실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이익 감소폭이 각각 3조4000억원, 2조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6%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최근 가동을 시작한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연산 규모를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하면 비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3만대)과 기아 조지아공장(35만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30만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세 공장의 생산능력은 100만대에 이른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HMGMA에서 생산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과 별도로 북미 수출량이 전체 생산의 84%에 달하는 한국GM은 ‘관세 폭탄’으로 위기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미국 현지에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 가격인 인상될 경우 판매량을 유지하긴 힘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군산공장처럼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높아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업체 타격이 불가피 하지만 경쟁 국가인 일본, 유럽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 재고 물량을 확대하는 등 최대 3개월 가량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한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무너지면 회생이 불가능하고 산업 생태계도 무너지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바우처,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추경편성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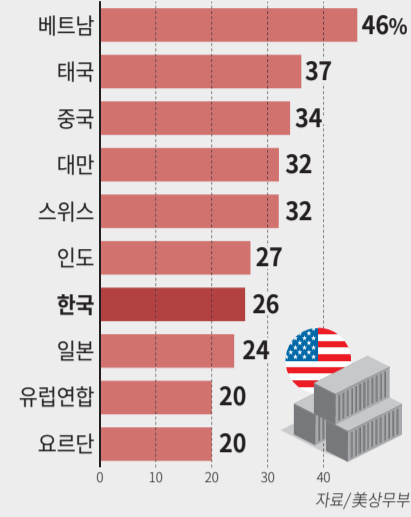
◆반도체·철강 상호관세 ‘대기모드’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업체는 상호 관세 중복 적용은 피했다. 다만 철강업계는 타 산업과 긴밀히 연관된 만큼 관세 영향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한숨 돌린 상황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도 최소 25%의 품목별 개별 관세를 예고한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등

주요국가 미국 상호 관세율

기본관세 10% 외 개별관세 추가 적용 국가



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에 대해 감세를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속도·범위·규모 등을 보면 1기 때와 비교가 안 되게 과감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도한 우려로 산업계가 위축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관세를 산정한 근거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책 발표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업종일수록 관세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게 될 다른 국가들과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라며 “기업들의 입장에선 물량 조절, 대체 공급망 모색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러 나라를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어 상호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 넘어 정치적 의도 분석 경제계, 한미 ‘정책 조율’ 요청 상의 ‘신뢰기반 소통 이뤄지길’

현재까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만큼 반도체 대체제가 없어 품목별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세계, 美관세폭탄 강한 우려

경제계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추후 한미 정부 간 ‘정책 조율’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韓 대행 “위기극복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경제안보전략TF

범정부 차원 긴급 지원대책 지시 최 부총리 “시장안정조치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하고 있다. /총리실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 G(선수급합금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전자업계, 베트남 등 정부 대응 예의주시

中·태국 등 글로벌 생산거점 영향

국내 전자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과 중국에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와 법인세 등으로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를 비롯 연관 업체들이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26% 상호관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는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46% 상호 관세가 부과된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의 생산기지가 있다. 삼성의 경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든다.

중국에도 쑤저우 삼성전자공장을 비롯해, 중국 난징과 톈진 등에는 LG전자가 공장을 두고 있다. 태국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진 공장을 가동 중

이다. 양사는 이번 상호 관세에서 멕시코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양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상당수는 멕시코 공장에서도 제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만들고 있다. LG전자도 멕시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자) 등 세 곳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두 업체 모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멕시코 공장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이혜민 기자